

태양광 발전에 전율하는 산 산 산

허정균/뉴스서천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새만금 내부 개발을 10년 앞당겨 2020년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란 33km의 방조제 안쪽에 138km의 방수제를 쌓아 간척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산이 헐려 바다로 들어가야 할지 측량하기도 어렵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에 이은 거대한 육상생태계 파괴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내 마을 뒷산이 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산들이 전율하고 있다. 전국에 수 백여개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오늘도 값싼 부지를 찾아 전국의 농촌 마을을 돌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곳곳에서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면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의무할당제란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울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다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의무적으로 할당된 생산량을 채우고 있다. 공급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부지를 찾다보니 생산비도 못건지는 전답이 태양광 발전단지로 변하는 곳도 있다. 쌀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어디 있겠는가. 곳곳에서 산이 헐리며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도 있다. 최근 서천군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알아본다.

<기산면 화산리>



▲기산면 화산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산1-3번지, 산 1-4번지, 산 1-5번지의 임야 총 9897㎡가 헐린 채 현재 방치돼 있다. 지난 해 5월 공사가 시작될 무렵 마을 주민들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았다. 사업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2.2mW급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안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이 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마을의 한가운데 얼굴같은 산허리가 홀랑 벗겨져 보기에 민망하게 흉한 꼴이 되었다”며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놀람과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울분을 삭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수가 나서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지난 해 1월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이어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내년 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땅의 소유주와 사업주는 서울 강남의 장 아무개씨로 밝혀졌다.

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형질변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공작물의 차폐를 위하여 메쉬웬스 및 차폐녹지를 조건으로 허가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9명의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심의가 이루어졌다. 현장 확인도 불충분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이 마을은 2004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04 농촌마을체험여행 시범추진 마을’에 선정됐으며 2014년 2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 지정됐다.

<화양면 월산리>

지난 1월 초 화양면 월산리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에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별목이 끝날 때까지 몰랐다. 토목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이 진입하자 주민들은 몸으로 이를 막아서자 공사는 중단됐다.

뒤늦게 마을 주민들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회의를 열어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 결의를 다졌다.

이 마을 주민 양 아무개씨는 “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지난 8일 설명회 때에야 알았다”며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태양광발전단지는 지난 해 5월 월산리 산 124-1~9번지에 9개업체의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체는 군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첨부해 허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초 인허가를 받았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당시 업체가 마을 이장 동의를 받아와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장은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태양광단지가 들어서려는 곳 바로 아래에는 6가호가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찬성하자 사업은 재개됐다.

<마서면 죽산리>

2014년 4월 한 태양광발전 업체가 이 마을 폐염전 지대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서 마을 주민 75명이 날인한 동의서를 마을 이장 임 아무개씨를 통해 받아갔다.

지난 3월 공사 시작을 하면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자신들의 허락없이 이장이 합의 도장을 찍은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이 아무개씨는 “마을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찬성한 것으로 둔갑해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주민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가 입수한 서류 복사본(사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업자가 기일이 촉박하고 동의

동 의 언 명 부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서명
김 동 기	[redacted]	사원로 마세면 마세로 번길	(redacted)
송 [redacted]	[redacted]	" 마세면 마세로 번길	(redacted)
장 성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정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현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훈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송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소 남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송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번길	(redacted)
김 [redacted]	[redacted]	" 하소길	(redacted)
김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redacted)
김 시 [redacted]	[redacted]	" 마세로	(redacted)
김 피 [redacted]	[redacted]	" 하소길	(redacted)

그러나 도장을 도용당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을 경찰에 고발하자 이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주민들은 고발을 취하했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 도장을 도용해 태양광발전사업에 동의한 문건

〈문산면 은곡리〉

면에 하나 있는 문산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다. 전교생 9명이다.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희망이 되고 있다.

태양광 업자들은 문산면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인 은곡리로 파고 들었다. 마

을 주민들은 대부분 출향한 땅 주인을 알려주어 업자들이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는 데 협조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분노를 터트리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주민들이 나서서 실력행사에 들어가 포클레인의 진입을 막았다. 경찰들이 출동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사업 부지 땅을 되사들이기로 했다. 사업부지에서 가까운 주민 8세대가 사업자들이 평당 4만원에 사들인 땅을 평당 7만원에 되사들임으로써 문제 해결이 됐다.

<문산면 구동리>



▲문산면 구동리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문산면 구동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곳은 문산면 구동리 산40(2만8685㎡), 산 40-2(936㎡), 산39(1만8149㎡) 등 총 4만7770㎡(약 1만 5000평)의 임야이다.

이 가운데 구동리 산40번지와 40-2번지 임야 1만4980㎡를 후보지로 하는 ‘구동리1호’(992kW)와 구동리 산40번지와 40-2번지 1만4651㎡를 후보지로 하는 ‘구동리2호’(992kW)는 충남도에서 이미 전기사업자 허가절차를 마쳤으

며, 구동리 산39번지 1만8149㎡를 후보지로 하는 ‘메가솔라8호’는 충남도에 전기사업자 허가를 신청 중이다. 도의 허가를 받은 두 곳은 아직 서천군의 산지전용 하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구동리 주민 56세대는 모두 연대 서명을 하고 결사 반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마을 김재섭 이장은 “서천군에서도 가장 오지이자 길산천의 발원지인 이곳의 숲은 잘 보존돼야 하며 1만 5천여평의 임야가 훼손됐을 때 마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태양광단지 후보지 바로 옆은 귀촌인 2세대가 정착을 위해 관정을 뚫고 호두나무 등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6월 1일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관련 부서 과장들과 면담했다. 군에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군 지역경제과 과장은 “산지관리법상 저촉사항을 찾지 못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구동리 주민들은 “결사 반대로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산면 화산리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자 서천군은 12월 ‘서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규정’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발행위 운영지침’,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비롯해 폐차장, 숙박시설 설치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발전시설 허가의 경우도 도로법상 도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상 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205미터 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폐염전을 제외한 해안선에서 250미터, 1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0미터,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 인가는 직선거리로 200미터, 주요 관광지나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이밖에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도 입지할 수 없다.

서천군에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두 180여건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큰 마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심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으며 군청 직원은 “태양광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과 같은 환경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건물 옥상이나 버려진 땅 등에서 소규모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재도입을 포함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